

June 2026  
No. 387

# INSS

## 전략보고

### 트럼프 2기 상호주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국의 대응 방향

홍건식  
hks21c@inss.re.kr

- I. 서론
- II. 상호주의 통상정책 특징
- III. 성과와 한계
- IV.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 대안

# 트럼프 2기 상호주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국의 대응 방향

## I. 서론

---

## II. 상호주의 통상정책 특징

---

1.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동시 활용
2. 경제와 안보의 연계
3. 표준 구축을 통한 중국 견제

## III. 성과와 한계

---

1. 성과
2. 경제적 비용과 정책적 한계
3. 세계경제 분절화 가능성 확대

## IV.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 대안

---

1. 시사점
2. 정책 대안

# 트럼프 2기 상호주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저자 | 홍건식

## 국문 초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강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제시하며, 관세와 무역 재협상을 주요 통상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다자체제 하의 상호 호혜적 시장 개방을 중시했던 전통적 상호주의에서 벗어나, 미국 시장 접근권과 관세 정책을 연계하여 상대국의 정책 조정, 대미 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유도하는 조건부 상호주의 기조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무역법 제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 기존 통상 제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며, 경제안보 중심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는 한국 경제에 기회와 위험 요인을 동시에 제공한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 공급망 전략의 핵심 협력국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 예상된다. 반면 대미 무역흑자 확대와 일부 산업의 공급 과잉 우려 등은 향후 미국의 통상 규제 및 정책 조정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은 경제안보와 통상전략을 연계한 종합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업별 보조금 체계와 공급망 구조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핵심 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기업·전문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통상법 제301조 조사, 공급망 규제, 투자 협상 등 다양한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상호주의,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전략적 자율성, 미중 전략경쟁

## I 서론

-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직후 ‘미국의 황금시대(Golden Age of America)’를 선포하며,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통상정책을 추진<sup>1</sup>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미국에게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무역 재협상과 관세를 외교·경제적 협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의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상호주의(reciprocity)’를 핵심 원칙으로 내세우며, 미국 중심의 통상 질서 재편을 추진하고자 함
  - 미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주요 법적 근거로 삼아 185개국 대상으로 기본 10% 관세와 국가별 상호(reciprocal)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광범위한 조치를 시행
  -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 무역법 제301조(불공정 무역) 등과 함께 다층적 통상 도구를 활용
- 전통적 상호주의가 상호 호혜적 시장 개방을 의미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주의는 미국 시장 접근권을 주요 협상 수단으로 활용
  - 특히 상대국의 정책 변화, 투자 확대, 공급망 재편, 안보 기여 등을 조건부 방식으로 연계하는 성격
  - 해외의 관세·비관세장벽, 산업보조금, 기술규제, 환율정책 등 미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국제규범 논리를 활용한 미국 중심 통상전략으로 해석 가능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주의 무역정책은 한국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
  -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 등 전략 산업에서 중요한 공급자로서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
  - 대미 무역흑자, 대중국 교역 의존도,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 이슈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통상 압박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
  - 따라서 한국은 경제안보와 통상전략을 통합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1 The White House, “America First Trade Policy,” Jan 20, 202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Accessed: April, 20, 2026)

- 본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주의 무역정책의 특징과 실질적 함의를 평가
  - 관세·비관세장벽의 동시 활용, 경제와 안보의 연계, 표준을 통한 중국 견제, 인권·노동 기반 통상정책 등 주요 측면에서 정책의 구현 양상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 협상 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
  -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함

## II 상호주의 통상정책의 특징

### 1.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동시 활용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는 핵심적인 외교·통상 협상 수단으로 기능함
  - 1기 행정부가 고율 관세 부과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면, 2기에서는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춤
  - 관세는 단순한 수입 억제 수단을 넘어 상대국의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협상 수단으로 작동함
- 미 행정부의 관세 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부 협상 구조를 보임
  - 기본 관세 부과 공표 → 상대국의 협상 테이블 참여 유도 → 특정 전략 산업의 양보 및 타협 요구 → 대미 투자·미국산 제품 구매·시장개방 확약 확보 → 관세의 부분적 완화 또는 예외 부여로 이어짐
-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관세 조치를 일시적 예외가 아닌, 상시적 통상정책 수단으로 활용 중<sup>2</sup>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무역정책 어젠다(Trade Policy Agenda)에서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시장 개방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며, 외국의 무역 장벽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한다”라고 명시함
  - USTR는 상호주의 관세 프로그램(Reciprocal Tariff Program)이 미국의 구조적인 무역적자를 시정하고 자국 내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근거임을 분명히 함
- 다만,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판결<sup>3</sup>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독자적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면서 정책 전반을 재편 중임
  - 행정부는 IEEPA 기반 관세를 종료하고,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임시 글로벌 관세(15% 수준) 도입과 무역법 제301조 조사의 대폭 강화를 통해 정책을 재편

2 Emily Green, David Lawder and David Shepardson, “Exclusive: US trade rep tells Mexican companies Trump tariffs here to stay, sources say,”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us-trade-rep-tells-mexican-companies-trump-tariffs-here-stay-sources-say-2026-04-21/> (Accessed: April, 22, 2026)

3 Andrew Chung and John Kruznel, “US Supreme Court strikes down Trump's global tariffs,” Reuters, Feb 21, 2026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us-supreme-court-rejects-trumps-global-tariffs-2026-02-20/> (Accessed: April, 16, 2026)

- 기존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평가됨, 관세 효과는 여전히 유지되나 통상 환경의 법적 불확실성은 지속하는 상황임
-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 과잉생산, 기술이전 강요 등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무역을 넘어선 산업정책 수단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함
  - 철강,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화학제품 등에서 중국의 국가 주도 모델이 시장 경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를 대중 산업 견제 수단으로 운용함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이러한 미국의 대중 관세 정책에 대해 “순수한 무역정책이라기보다 거시적 산업정책 및 지정학적 전략에 가깝다”고 평가함<sup>4</sup>
- 관세 장벽 못지않게 외국의 비관세장벽(NTBs) 역시 주요 상응 조치의 대상으로 부상함
  - 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각국의 데이터 국경 규제 및 기술표준 등을 사실상의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함<sup>5</sup>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역시 2026년 청문회에서 미국 생산자와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외국의 자의적 무역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sup>6</sup>
- 여기에 인권·노동 기준을 통상정책과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트럼프 2기 상호주의의 차별화된 특징임
  - 2026년 3월 USTR은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사(60개국 대상)와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Section 301 조사(16개국 대상, 한국 포함)를 연이어 개시함

4 Anjali V. Bhatt, “PIIE experts react to Trump’s tariffs announced April 2,” April 3, 2025,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s/2025/piie-experts-react-trumps-tariffs-announced-april-2> (Accessed: April, 16, 2026)

5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Releases 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March 31, 2026,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march/ustr-releases-2026-national-trade-estimate-report> (Accessed: April, 22, 2026)

6 Jamieson Greer, “Chairman Smith Opening Statement at Hearing with U.S. Trade Representative Jamieson Greer: America Must Continue Tearing Down Trade Barriers That Hurt American Producers and Workers,” Ways and Means Committee, April 22, 2026, <https://waysandmeans.house.gov/2026/04/22/chairman-smith-opening-statement-at-hearing-with-u-s-trade-representative-jamieson-greer-america-must-continue-tearing-down-trade-barriers-that-hurt-american-producers-and-workers/> (Accessed: April, 22, 2026)

- 이러한 규제는 인권·노동 기준 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의존 공급망 축소와 미국 중심 공급망 협력을 유도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주의는 안보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관세 압박 수단으로 활용됨
  - 안보적 특수성보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산업경쟁력을 기준으로 접근하며, 관세 완화의 대가로 디지털 규제 완화, 탄소규제 조정, 공급망 협력 등 비관세 부문의 양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함
  - USMCA 재검토 과정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와 중국산 부품 제한을 요구한 사례로 평가됨
  - 한국 역시 2025년 체결된 「한미 전략무역·투자협정」을 통해 25%에서 15%로 관세 상한을 적용 받는 대신, 총 3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확약을 하는 등 거래적 상호주의의 직접적 영향권

## 2. 경제와 안보의 연계

- 트럼프 2기 행정부 상호주의의 가장 핵심 정책 수단은 경제정책과 안보 전략의 통합임
  - 무역협정, 관세 조정, 투자 유치, 공급망 정책, 기술 통제, 에너지 수출, 동맹국 조달 정책 등이 개별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아래에서 통합적으로 운용됨
  - 즉,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통합 국가전략 체계로 취급함
- 이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통상정책의 지향점을 단순한 교역량 확대나 관세 인하에서 벗어나 산업기반 복원, 공급망 회복력 강화, 전략적 경쟁국 견제, 미국 노동자 보호로 재정의함<sup>7</sup>
  - 이는 통상정책의 평가 기준이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안정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함
  -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시장 접근권, 핵심 기술 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동맹국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기여와 책임을 수반하도록 요구하는 전략적 상호주의 형태로 변화
- 경제와 안보의 연계는 USTR의 위상 및 역할 변모에서도 관찰됨
  -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질서 내에서 시장개방 협상과 FTA 추진, 분쟁 조정에 집중했던 USTR은 이제 미국의 산업정책과 국가안보 기조에서 중심적인 전략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됨

7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HE PRESIDENT'S 2026 TRADE POLICY AGENDA," March 2, 2026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leases/2026/2026%20Trade%20Policy%20Agenda.pdf> (Accessed: April, 22, 2026).

- USTR은 현재 제조업 회복 지원, 핵심 공급망 재편을 위한 양자 협상, 중국의 비시장 정책(Non-market policies) 대응, 전략 산업 중심의 새로운 무역 규범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는 의회 청문회에서 가격 효율성 보다, 공급망의 전략적 통제권 확보가 통상정책의 중요한 정책 목표임을 피력한 바 있음<sup>8</sup>
- 과거 냉전 시기나 자유무역 시대에는 안보동맹이 통상 갈등을 흡수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안보동맹 자체가 경제적 양보와 기여를 요구하는 직접적인 논거로 작용함
    - 관세 및 시장 접근권을 매개로 동맹 관계를 군사적 협력을 넘어선, 보다 조건부 성격의 관계로 재정의함
    -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구체적 조치는 미국산 첨단 무기 및 LNG 구매 확대, 미국 내 하이테크 생산시설 투자, 중국과의 민감 기술 협력 제한, 미국 중심 공급망 조달 체계 편입 등 다층적으로 전개됨
  - 결과적으로 미국은 공식적인 FTA 협정의 전면 개정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도, 자국의 보조금 제도(IRA, Chips법 등)와 시장 접근권을 수단 삼아 사실상의 경제안보 투자협정을 끌어내고 있음
    - 거대한 자국 시장 규모와 강력한 산업정책을 레버리지로 삼아 한국, 대만, 일본 등 핵심 우방국의 미국 내 생산 확대 전략
    - 핵심광물 부문의 우방 중심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LNG) 구매와 안보 동맹의 결합, 그리고 한국과의 조선·방산 분야 협력 강화 기조 역시 이러한 맥락
  -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경제와 안보의 연계는 단기적 카드가 아니라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는 양상
    - 자유무역 시대에는 효율성 기반의 경제적 논리가 지배했다면, 이제는 “지정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 간 공급망 협력, 즉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 최우선 가치
    - 즉, 상호주의의 협상은 단순 세율 조정을 넘어 생산기지와 공급망 협력을 미국 중심으로 조정하려는 전략

8 “미국은 더 이상 취약한 공급망에 의존할 수 없으며, 통상정책은 미국 산업기반과 노동자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 Greer, “Chairman Smith Opening Statement at Hearing with U.S. Trade Representative Jamieson Greer: America Must Continue Tearing Down Trade Barriers That Hurt American Producers and Workers,” (2026),

### 3. 표준 구축을 통한 중국 견제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단순 관세 장벽을 넘어,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규칙(Rules)과 표준(Standards) 자체를 미국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중국 상품의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사후적 대응을 넘어, 공급망의 원천 기준, 기술 규범, 원산지 규정 등을 선점함으로써 미래 산업 규범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접근
  - 이를 통해 중국의 산업 확장세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제약하려는 전략
  
- 통상정책의 중심축이 국경에서의 ‘세율 조정’에서 생산과 투자 단계를 제약하는 ‘규칙 기반 전략경쟁(Rule-making competition)’으로 이동한 점은 트럼프 2기 상호주의를 관통하는 주요 변화임

  - 국경에서만 작동하는 관세와 달리, 기술 및 공급망 표준은 기업이 제품을 설계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작동하여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침
  - 즉, 미국이 표준을 설계하고 선점하면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미국 기준 중심의 공급망 조정 압력이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됨
  
- 현대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표준, 공급망 인증, 원산지 규정, 데이터 이동 규칙, 사이버보안 기준, 탄소규제, 정부조달 자격요건 등에 의해 좌우됨

  -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과의 산업정책 조율, 대중 기술 통제 메커니즘 고도화, 규칙 설계를 중심으로 경쟁 전략을 변화함
  -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중심 공급망(friend-shoring) 구축을 핵심 수단으로 삼아, 주요 전략 산업에서 미국 주도 규범 조율을 확대 중

〈표 1〉 주요 분야별 미국 중심 규범 강화 내용

핵심 분야	주요 내용
전기차·배터리	· 핵심광물 조달국 요건, 배터리 부품 생산국 기준, 최종 조립지 기준, 우려했던(FEOC) 배제 규정, IRA 전기차 세액공제 연계 강화
반도체	· 첨단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통제, AI 반도체 성능 제한, 미국 보조금 수령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설계·장비·소재 공급망 동맹화
디지털 통상 규범	· 데이터 국경 간 이동,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플랫폼 규제, AI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기준, 디지털세

출처: 저자 정리

- 트럼프 2기 상호주의는 전통 제조업을 넘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미래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도 미국식 개방 모델과 보안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함
  - 다자주의적 자유무역보다는 미국과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선택적 경제 협력 체계를 선호
  - 특히 우려국가(FEOC) 배제 및 원산지 추적 메커니즘의 고도화는 중국 자본의 우회 투자 가능성을 제한하고 기술 유출을 막는 핵심 장치로 활용됨
  - 이는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 속도를 제약하는 동시에, 동맹국의 우수한 생산능력과 기술 자원을 미국 중심의 거대한 전략 체계 안으로 연계하려는 미국 중심 공급망 협력 체계 확대 전략으로 평가됨

### III 성과와 한계

#### 1. 성과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시장 접근권이라는 구조적 우위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상대국과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 양자 및 다자 협상의 핵심 메커니즘은 미국 시장에 대한 차별적 접근권을 대가로 상대국의 대미 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이행, 안보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조건부 협상 구조
  - USMCA(미·멕시코·캐나다 협정) 재검토를 통한 원산지 규정 강화,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규제 및 보편 관세 유예 협상, 한국·일본·대만과의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통제 공조, 중국을 겨냥한 시장 개방 요구 등에서 관세 위협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며 대외 통상 협상력을 강화함
- 미국 정부는 고율 관세 리스크라는 '채찍'과 IRA·Chips법 보조금, 세액공제, 연방조달 우대라는 '당근'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글로벌 핵심 기술 기업들의 투자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차세대 배터리, 핵심 광물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 분야에서 외국 핵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기지 건설 및 리쇼어링이 추진됨
  - 이는 과거의 단순한 비용 절감형 해외 아웃소싱(Outsourcing) 시대를 변화시키고, 주요 첨단 산업의 글로벌 생산거점 자체를 미국 영토 내로 이전하는 생산거점 이전 흐름을 확대하고 있음<sup>9</sup>

〈표 2〉 주요 대미 투자 사례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 투자 확대
TSMC	애리조나 공장 누적 투자 650억 달러 이상
현대차그룹	조지아 EV 메타플랜트 가동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북미 배터리 생산 확대

출처: 저자 정리

9 UBS, "Quantifying Trump's reciprocal tariffs," Economics & Strategy <https://www.ubs.com/global/en/investment-bank/insights-and-data/2025/quantifying-trumps-reciprocal-tariffs.html>

- 상호주의 관세 및 보편 관세의 도입 이후, 연방 정부의 관세 수입이 증가
  - 2025년 평균 실효 관세율은 2024년 2.4%에서 7.7%로 상승(1947년 이후 최고치)<sup>10</sup>했으며, 연방 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관세를 통해 약 2,640억 달러의 세수를 조달한 것으로 추정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비관세장벽(NTB)과 공급망 규제를 강화하며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추진
  -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집행 강화와 Section 301 조사를 통해 중국 의존 공급망 축소와 우방중심 협력을 유도
  - USTR은 관세 완화의 대가로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 도입을 약속받음으로써, 강제노동 연계가 의심되는 중국산 소재·부품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을 격상시키고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을 추진

## 2. 경제적 비용과 정책적 한계

- 상호주의 정책은 여러 구조적 한계와 비용을 드러내고 있음
  - 기존 FTA 체결국에게도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진정한 상호주의’가 훼손됨
  - FTA 파트너국이 미국산 제품에 평균 0.6%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평균 11.5%p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비대칭성이 발생
-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상호주의는 미국 수출품에 대해 이미 매우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개방형 경제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비대칭 현상을 보임
  - 유럽연합(1.7%), 뉴질랜드(1.5%), 베트남(2.9%), 인도(6.2%) 등 미국산 제품에 비교적 낮은 관세를 적용해 온 국가들에 15%에서 최대 25%에 달하는 높은 미국발 고율 관세 부담을 지게 됨
  - 초기 “예외 없는 글로벌 관세” 기조와 달리, 2025년에는 미국 수입품의 최대 64%가 각종 면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이 약화하였다는 지적<sup>11</sup>

10 Erica York, Alex Durante, “Tracking the Impact of the Trump Tariffs & Trade War,” Tracking the Impact of the Trump Tariffs & Trade War, May 5, 2026,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trump-tariffs-trade-war/> (Accessed: April, 22, 2026)

11 Scott Lincicome, Alfredo Carrillo Obregon, and Chad Smitson, “One Year After “Liberation Day”: Here’s What We Know and What We Don’t,” Cato at Liberty, April 2, 2026, <https://www.cato.org/blog/one-year-after-liberation-day-heres-what-we-know-what-we-dont> (Accessed: April, 22, 2026)

-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이 미국 수입기업·제조업체·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생산비용 상승과 물가 압력을 초래<sup>12</sup>
  -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고도화된 현대 산업 구조에서 중간재에 부과된 관세는 미국 제조업의 생산 비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려 자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오히려 낮추는 역효과를 초래
  - 전미경제연구소(NBER) 등에 따르면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미국 GDP를 0.2~0.5%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sup>13</sup>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주의 통상정책은 강력한 행정권 활용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미국 내부의 정치·법률·경제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는 일정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2026년 연방대법원의 IEEPA 관련 판결은 대통령의 독자적 관세 권한 행사에 일정한 제동을 걸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통상 조치 역시 의회 및 사법부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미국의 전통적 자유무역 지지 세력, 글로벌 기업, 금융시장, 소비자 단체 등은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효율성과 물가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특히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재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발생할 경우,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재의 상호주의 통상 전략은 미국 통상정책의 구조적 변화라는 측면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정치적 성향 및 국내 정치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 3. 세계경제 분절화 가능성 확대

- 미국 중심 상호주의 통상정책은 다자무역 질서의 붕괴를 넘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간의 독자적 경제 블록 형성을 자극하여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대안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sup>14</sup>

12 Maximiliano A. Dvorkin, Fernando Leibovici, Ana Maria Santacreu, "How Tariffs Are Affecting Prices in 2025,"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October 16, 2025, <https://www.stlouisfed.org/on-the-economy/2025/oct/how-tariffs-are-affecting-prices-2025> (Accessed: April, 16, 2026).

13 Andrés Rodríguez-Clare Mauricio Ulate Jose P. Vasquez, "THE 2025 TRADE WAR: DYNAMIC IMPACTS ACROSS U.S. STATES AND THE GLOBAL ECONOMY," NBER WORKING PAPER SERIES, May 2025,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nber.org/system/files/working\\_papers/w33792/w33792.pdf](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nber.org/system/files/working_papers/w33792/w33792.pdf), (Accessed: April, 22, 2026).

14 James Bacchus, "World Trade Without the US," Policy Analysis No. 1014, March 12, 2026 <https://www.cato.org/policy-analysis/world-trade-without-us#trading-around-united-states>, (Accessed: April, 22, 2026).

- 미국이 2020년 이후 신규 FTA 협상을 전면 중단한 사이, 유럽연합(EU)은 메르코수르(MERCOSUR), 인도, 호주와 전통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캐나다는 태국·필리핀과 협상을 시작함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기존 무역 협정에 따른 미국의 약속을 훼손함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들은 미국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제외 거대 FTA 연합(Trading Around the United States)' 체결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 관세 장벽을 우회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이전과 중국의 다각적 맞대응이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의 분절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의 상호주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공급망을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10% 부과 대상국인 호주 및 중남미)로 이전하고 있음
    - 베트남(46%), 태국(36%), 대만(34%) 등은 가장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회 수출 및 대체 생산기지의 지위가 강화되며 대미 수출 증가 흐름이 확대되는 변화가 발생함
- 중국 견제 측면에서는 반도체 장비 통제, 배터리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첨단산업 성장을 지연시키는 부분적 성과
    - 그러나 중국이 반도체 자립 투자 확대, 내수 중심 성장,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및 중동 시장 교역 확대로 대응하면서 공급망의 완전한 분리가 아닌 부분적 분리와 병행 구조로 귀결됨
    - 결과적으로 트럼프 2기 상호주의는 장기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을 제도화하고, 세계 경제를 다극화된 지역 블록으로 파편화시켜 글로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함
- 미국 중심의 상호주의 통상질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함
    - 유럽연합(EU), 중국,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은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독자적 경제협력 및 지역 통합 전략을 병행 강화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기업들 역시 미국 시장 접근 유지와 중국 시장 의존 사이에서 이중적 공급망 전략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가 완전한 디커플링보다는 부분적 블록화와 제한적 상호의존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함
    - 따라서 향후 국제통상 질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재편이라기보다, 주요국 간 전략 경쟁과 상호조정이 병존하는 복합적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IV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 대안

### 1. 시사점

- 미국 시장 패러다임이 공공재에서 거래재로 전환되고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주의 무역정책은 단기적 관세 갈등을 넘어, 미국 시장 접근권을 협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더 이상 시장을 무상 공급되는 다자주의적 공공재로 제공하지 않으며, 동맹국에 대해서도 투자, 조달, 공급망 협력, 안보 기여를 요구하는 거래적 접근을 취함
  -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기여를 요구받는 구조
- 한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 상대국인 동시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방산 등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핵심 제조 공급 역량을 보유한 핵심 전략 협력국
  - 한국은 미국에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인 동시에 높은 수준의 협상 요구 가능성이 존재하는 대상이라는 구조적 이중성을 안고 있음
- 2026년 상반기 전개된 미국의 통상 조치들은 한국이 더 이상 안보 동맹이라는 이유로 무역 보복의 예외 지대를 보장받지 못함을 실증함
  - 특히 2026년 3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착수한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이행 관련 일련의 '통상법 제301조(Section 301) 조사'는 한국을 특수 동맹 보다 통상 규율 적용 대상국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
  - 이는 기존의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과 안보·경제 분리 접근에 대한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함

### 2. 정책 대안

- 패키지형 딜(Package Deal)을 통한 한·미 통상 협정 구조의 재설계와 대미 투자 연계로 관세 리스크 상시 관리
  - 한국은 2025년 체결된 '한·미 전략무역투자협정(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을 통해 초기 25%의 상호주의 관세 대상국에서 15% 상한 적용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둠
  - 그러나 이는 조선 산업 1,500억 달러,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대가로 얻어낸 조건부 협상 결과

- 2026년 3월 한국 국회가 이행 특별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미국의 투자 속도 압박이 지속되는바, 이행 지연 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최소화
- 개별 품목별 단선적 협상 보다도 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② 조선·방산 공동 개발, ③ 원전 및 LNG 에너지를 포함한 대미 투자 계획, ④ 국방조달협정(RDP-A) 연계를 하나의 포괄적 패키지 행태로 연계하여 협상력을 재고
  - 디지털·신산업 규범 공조 체계 선제 구축을 위해 USTR이 추진 인증 디지털세, 데이터 국경 이동, AI 거버넌스 협상에 대응해서 한·미 간 사전 조율 채널을 가동
  - 미국 주도의 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미 FTA를 단순 상품 교역 협정에서 경제안보 협력 체계로 확장 개편해야 함
- USTR 통상법 제301조(Section 301) 조사에 대한 종합 대응 체계 구축
  - 2026년 3월 USTR이 발표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3월 11일, 한국 포함 16개국 대상)'와 '강제노동 이행 조사(3월 12일, 한국 포함 60개국 대상)'는 한국 주력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 가능
  - 철강, 조선,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화학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및 우회 수출 여부를 조사하여 상계관세나 수입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양·음극재, 태양광 폴리실리콘, 희토류 등에서 한국 제품이 중국의 '강제노동 우회 공급망'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내포함
  -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보조금 건전성 입증 및 과잉생산 불식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대체 조달국(미·호주·캐나다·칠레) 확보로 공급망 분절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정부-기업-로펌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301조 소송에 공조
- 공급망 재편의 비용 통제와 대미 투자 전략의 고도화
  - 대미 자본 유출과 기술 유출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를 단순 양산형 공장 건설에서 고부가가치 영역(HBM·첨단 패키징, 전고체 배터리, SMR 원전 등) 중심의 '핵심 노드(Node) 투자'로 전환 추진
  - 이에 상응하는 연방 보조금 수령, 세제 혜택 명문화, 기술 소유권 보호 등을 미국 정부에 상응 조건으로 요구
  - 중국 의존형 공급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 아세안(ASEAN), 중동, 중남미를 차세대 전략 시장으로 지정하여 교역 구조 다변화

- 미국·호주·캐나다와의 '핵심광물 파트너십(MSP)'을 실질화하는 동시에, 국내 자원 비축 제도 정비, 폐배터리 재활용 인프라 확충, 대체 소재 개발 투자를 병행하여 대중국 의존도의 단계적 감축 추진
- 한국은 미국 중심 공급망 체계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특정 국가 및 단일 시장 의존도를 과도하게 심화시키지 않도록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병행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되, 중국·아세안·중동·유럽연합(EU) 등과의 교역 및 투자 네트워크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확보해야 함
  - 특히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생산 거점과 수출 구조가 지나치게 미국 시장 중심으로 고착될 경우, 향후 미국의 정책 변화나 정치적 압박에 대한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함
  - 이에 따라 인도, ASEAN,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CPTPP·IPEF·한-EU 협력 등 다층적 경제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통상 다변화 전략이 요구됨
-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와 서비스·중소기업 공급망 편입 지원
  - 차세대 AI 반도체, 전고체 및 리튬메탈 배터리, 양자컴퓨팅, SMR, 방산 시스템 등 핵심 경제안보 자산에 대한 R&D 투자를 국가 주도로 확대 추진하여 기술 주권 확보
  - 미국의 대외 서비스 무역 흑자 기조를 활용하여 K-콘텐츠, 바이오·의료, 핀테크, 게임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대미 수출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상품 무역 위주의 흑자 구조가 유발하는 통상 마찰을 완화해야 함
  - 대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낙오하기 쉬운 중소·중견 부품 기업들이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및 ART 규범 내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해야 함
- 범정부 경제안보 통합 거버넌스의 법제화
  - 백악관을 중심으로 USTR,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미국식 경제-안보 연계 거버넌스를 참고해, 우리도 효율성에 기반한 부처별 대응 체계 재정비 추진
  - 현재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임시 담당하는 구조를 탈피하여, 실질적 예산권과 정책 조정 권한을 보유한 '경제안보전략회의'를 법제화하고 상설 운영함으로써 산업·외교·안보·통상을 연계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 고려
  - 행정부(USTR·상무부)뿐만 아니라 의회 세제·통상 담당 핵심 위원회에 대한 소통 채널을 상시로 확대

---

## 참고문헌

---

- Bacchus, James. "World Trade Without the US," Policy Analysis No. 1014, March 12, 2026 <https://www.cato.org/policy-analysis/world-trade-without-us#trading-around-united-states>, (Accessed: April, 22, 2026)
- Bhatt, Anjali V., "PIIE experts react to Trump's tariffs announced April 2," April 3, 2025,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s/2025/piie-experts-react-trumps-tariffs-announced-april-2> (Accessed: April, 16, 2026)
- Chung, Andrew and Kruzel, John. "US Supreme Court strikes down Trump's global tariffs," Reuters, Feb 21, 2026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us-supreme-court-rejects-trumps-global-tariffs-2026-02-20/> (Accessed: April, 16, 2026)
- Dvorkin, Maximiliano A., Leibovici, Fernando, Santacreu, Ana Maria. "How Tariffs Are Affecting Prices in 2025,"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October 16, 2025, <https://www.stlouisfed.org/on-the-economy/2025/oct/how-tariffs-are-affecting-prices-2025> (Accessed: April, 16, 2026)
- Green, Emily, Lawder, David and Shepardson, David. "Exclusive: US trade rep tells Mexican companies Trump tariffs here to stay, sources say,"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us-trade-rep-tells-mexican-companies-trump-tariffs-here-stay-sources-say-2026-04-21/> (Accessed: April, 22, 2026)
- Greer, Jamieson. "Chairman Smith Opening Statement at Hearing with U.S. Trade Representative Jamieson Greer: America Must Continue Tearing Down Trade Barriers That Hurt American Producers and Workers," Ways and Means Committee, April 22, 2026, <https://waysandmeans.house.gov/2026/04/22/chairman-smith-opening-statement-at-hearing-with-u-s-trade-representative-jamieson-greer-america-must-continue-tearing-down-trade-barriers-that-hurt-american-producers-and-workers/> (Accessed: April, 22, 2026)
- Lincicome, Scott, Obregon, Alfredo Carrillo, and Smitson, Chad. "One Year After 'Liberation Day': Here's What We Know and What We Don't," Cato at Liberty, April 2, 2026, <https://www.cato.org/blog/one-year-after-liberation-day-heres-what-we-know-what-we-dont> (Accessed: April, 22, 2026)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HE PRESIDENT’S 2026 TRADE POLICY AGENDA,” March 2, 2026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leases/2026/2026%20Trade%20Policy%20Agenda.pdf> (Accessed: April, 22, 2026).

\_\_\_\_. “USTR Initiates 60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Failures to Take Action on Forced Labor,” March 12, 2026,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march/ustr-initiates-60-section-301-investigations-relating-failures-take-action-forced-labor> (Accessed: April, 22, 2026).

\_\_\_\_. “USTR Releases 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March 31, 2026,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march/ustr-releases-2026-national-trade-estimate-report> (Accessed: April, 22, 2026).

Rodríguez, Andrés, Ulate, Clare Mauricio, Vasquez, Jose P.. “THE 2025 TRADE WAR: DYNAMIC IMPACTS ACROSS U.S. STATES AND THE GLOBAL ECONOMY,” NBER WORKING PAPER SERIES, May 2025,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iclfindmkaj/https://www.nber.org/system/files/working\\_papers/w33792/w33792.pdf](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iclfindmkaj/https://www.nber.org/system/files/working_papers/w33792/w33792.pdf)(Accessed: April, 22, 2026).

The White House, “America First Trade Policy,” Jan 20, 202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Accessed: April, 20, 2026)

UBS, “Quantifying Trump’s reciprocal tariffs,” Economics & Strategy <https://www.ubs.com/global/en/investment-bank/insights-and-data/2025/quantifying-trumps-reciprocal-tariffs.html>

York, Erica, Durante, Alex. “Tracking the Impact of the Trump Tariffs & Trade War,” Tracking the Impact of the Trump Tariffs & Trade War, May 5, 2026,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trump-tariffs-trade-war/> (Accessed: April, 22, 2026)

## Abstract

# The Reciprocal Trade Policy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s Strategic Response

Kunsik Hong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has reinforced its “America First” agenda by actively utilizing tariffs and trade renegotiations as key instruments of trade policy. Moving beyond the traditional concept of reciprocity based on mutual market openness unde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ashington has increasingly linked access to the U.S. market with tariff measures to encourage policy adjustments, expanded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tronger supply chain cooperation from partner countries. To implement this approach, the administration has relied on multiple trade mechanism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and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while strengthening trade policies centered on economic security.

These shift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present both opportunities and risks for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has emerged as a major partner in U.S.-led supply chain strategies in advanced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batteries, shipbuilding, and electric vehicles. Seoul is expected to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the restructuring of global supply chains and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South Korea's growing trad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oncerns regarding excess production capacity in certain industries may increase its exposure to future U.S. trade regulations and policy adjustments.

Accordingly,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establish a more systematic and integrated

response framework linking economic security and trade strategy. Seoul should continue to share objective data on industrial subsidies and supply chain structures with U.S. authorities while diversifying sources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intermediate goods to reduce supply chain risks. In addi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businesses, and experts to improve its capacity to respond to a broad range of trade issues, including Section 301 investigations, supply chain regulations, and investment negotiat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reciprocal trade policy is not merely a temporary protectionist measure but part of a broader transition toward a security-oriented trade order. In response, the Republic of Korea will need to pursue a balanced strategy that combines closer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greater strategic autonomy through diversified trade and supply chain partnerships.

Keywords: Trump, Reciprocal Trade, Economic Security, Supply Chain, Strategic Autonomy,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INSS

## 전략보고

June 2026  
**No. 387**